



전국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관 한자리에... 자살률 감소세의 확고한 지속에 박차키로

- 자살사망자 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800명 이상 감소
- 자살예방 전담조직·인력 확충, 지역 네트워크 구축, 지방정부별 맞춤형 대책 시행, 자살률에 따른 평가·포상·공개 강화 추진키로

□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이추진본부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9월 1일(화)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「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관 정책협력 회의」를 개최하고,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-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각 지역의 자살예방정책을 총괄하는 자살예방관*들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여 중앙의 정책을 지역의 실행력으로 연결하고, 자살예방관을 중심으로 지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.

* 「자살예방법」 및 '2025 국가자살예방전략'에 따라 지방정부(광역·기초)별로 **부단체장급 이상 1인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**하여 지역 내 자살발생 현황, 자살예방정책 추진 상황 및 대응체계 등을 총괄적으로 점검

□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,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84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감소세는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감소세를 지속적인 흐름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,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.

- 먼저, 16개 시도의 2024년,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까지의 **자살현황을 면밀히 점검**하고, 자살사망자 수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예방관이 지역별 자살현황과 위험요인을 직접 살피고, 지역 특성에 맞는 **맞춤형 대책을 마련·시행**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.
 - 또한, 각 지방정부가 자살예방정책을 지역의 핵심 정책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**▲지역별 자살현황 대국민 공개 ▲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강화 ▲자살률 감축 우수 지방정부에 대한 포상 확대** 등 성과에 기반한 관리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.
 - 아울러, 자살예방관 주도하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**촉촉한 생명안전망**을 구축하고, 지역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기획·조정 기능이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**전담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확충**할 필요성도 강조했다.
- 지방정부 자살예방관들은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,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의 인구구조, 사회경제적 여건, 자살 위험요인 등 **지역별 정책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시책으로 전환**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, 자살예방의 성과는 결국 **지역 현장의 실행력**에 달려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.
-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“자살사망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**긍정적 신호**”라며, “지금이야말로 이 같은 감소 흐름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**확고한 추세로 정착**시켜야 할 때”라고 말했다.
- 이어 “지역별로 자살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, 자살예방관이 지역의 자살 예방 대응체계 확립을 **최우선 과제로** 삼고 직접 챙겨주기 바란다”면서, “정부도 지역 현장에서 자살예방정책이 보다 **강력하고 일관된 기조**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개, 평가, 보상 확대 등 **정책적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**해 나가겠다.”고 강조했다.

※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,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☎109, 청소년 상담 전화 ☎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	책임자	과 장 이효식 (044-200-6369)
		담당자	서기관 정윤종 (044-200-6385)